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대책 마련을”

민주, 법사위 전면 개편 추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전동킥보드 등 안전 이용
위해 제도 마련 촉구
감염병 관리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도 요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연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을 발의한 송 의장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적용받아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 확보와 주행방법·안전기준·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와 소관부처 지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의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으

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문’과 ‘농작물 지위 확보와 주행방법·안전기준·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와 소관부처 지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의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으

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과 종료이전 차과감소 보험금’ 보장수준을 80%로 높일 것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체계지구 심사’ 의장 직속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면 개편키로 하는 등 ‘일하는 국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내내 ‘발목잡기 상임위’라는 오명을 안은 법사위의 주요업무인 ‘체계·지구 심사권’을 폐지하되 국회 의장 직속에 관련 기구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추진단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선 크게 법사위의 체계·지구 심사폐지 시 후속방안, 상시국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사위의 체계·지구 심사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핀다는 이유지만 법안 통과 저지 등으로 악용되면서 ‘입법 병목현상’, ‘육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지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구를 의장 직속에 두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체계·지구 심사와 관련해 크게 3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가장 유력하게는 의장 직속으로 체계·지구 검토 기구를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최종 결정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체계·지구 심사권이 제외되면 법사위는 사법위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법위는 법무부, 검찰청, 법원 등 소관의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 것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장 직속 기구에 야당도 포함되는 않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폐해 극복을 위해 체계·지구 심사를 독립하자는 취지 아니겠느냐”며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기술적,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정의, ‘젠더폭력 근절’ 등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 발표

정의당은 26일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 등을 21대 국회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 우선 통과돼야 하는 5가지 법안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 ▲그린 뉴딜 추진 특별법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을 꼽았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선인 총회를 갖고 21대 국회 3대 핵

심과제와 5대 우선 법안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과 민생,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의당의 상임위 배정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도명장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도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서... 강용구 의원, 조례 대표발의
도내 숙련 기술자 자긍심 고취·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도명장 조례를 추진한 도의회 강용구위원장 주축로 열렸으며, 서암석 대한민국명장, 양해승 산업인력공단 차장, 신원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강용구(남원 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를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및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과 전라북도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을 다룬 본문 규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이뤄졌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된 근거조항을 기초로 입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명장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도민으로서 도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기본 자격요건이다. 강 위원장은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장 증서와 명장패 등이 수여되고 기술장려금 등의 지원도 뒤따를 예정으

로 향후 숙련기술자의 예우와 명예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암석 명장(2014년 통신편비 분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은 “다른 곳에 비해 전라북도가 그동안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면서 전라북도명장 조례 추진에 대해 환영과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신원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조례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의 집행기관이 숙련기술자의 예우와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도의회 농산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해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김태년·주호영, 원구성 첫 회동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법정시간 내 국회 개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분청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공감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일부 상임위에 대해서도 각당 입장을 교환했으나 의견 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 예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다. /뉴시스

미래한국, 통합당과 합당 결정

미래한국당이 26일 결의문을 통해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선인 합동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결의문에서 “미래한국당은 태어날 때부터 4·15 총선 후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미래한국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지난 연말 대한민국 국회에는 독선적인 집권여당의 위력만이 존재했다. 한국당은 위력과 야합이 손잡은 누더기 선거약법에 대항하기 위해 정당밖의 차원에서 국민들께 보고하고 만든 정당”이라며 “지난 총

선 때 국민들께서는 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셨다. 호된 회초리가 따뜻한 격려로 바뀔 때까지 모든 것을 바 꾸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날 ▲형제정당인 통합당과의 하나 됨 ▲선거약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폐지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성실히 나서줄 것을 야당에 촉구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등 세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후 한국당 최고위원들은 대표실로 이동해 최고위원회를 열고 통합당과 5월29일까지 합당한다는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